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9. (수)	
		작 성	국무조정실 여성가족아동과 과장 양찬희 / 서기관 채명숙 (Tel. 044-200-2332)
		문 의	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과장 최은주 / 사무관 노현서 (Tel. 02-2100-6362)
* 엠바고 : 3.9(수) 15시30분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말씀자료 별도배포 * 여가부 공동배포			

다문화가족정책, 이제는 ‘자녀성장지원’ 이다!

- 황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,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
 - ‘多재다능 프로그램’ 신규 운영, 중도입국자녀 입국시 교육청으로 정보연계
- 정부는 3월 9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*를 개최하여 「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」, 「다문화가족정책 유사·중복 점검·관리 방안」 등을 심의하였다.
- * (참석) 정부위원 11명(교육·법무·여가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미래·외교·행자·문체·복지·고용부 차관, 농식품부 차관보), 민간위원 7명
-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처음 마련한(06.4.26) 이후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먼저, 「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‘영유아기’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‘15년 기준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에는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.
- ‘학령기’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·리더십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을 위한 ‘多재다능 프로그램’을 시작하여 올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.
- ‘청년기’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, 군 입대시 복무적응 방안을 마련하며,
- 이중언어 인재를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이중언어 인재 DB를 올해부터 구축·운영할 계획이다.
- 또한 중도입국 자녀*의 경우 학업중단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*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 등을 계기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

□ 이어서, 「다문화가족정책 유사·중복 점검·관리방안」을 통해 그간의 다문화가족정책 유사·중복 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,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신규 또는 계속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·중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*를 ‘상시적’으로 운영하고,

* 4개 분과(초기적응, 인식제고, 인권보호, 사회참여) 운영

- 지자체 · 지역교육청 · 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의 조정 결과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유사 · 중복사업을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“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응 지원 강화”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고,
 - 특히, 초기정착, 취업지원, 자녀교육 등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강화하고, 다문화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.
 - * 다문화가족지원센터(개소수): ('06) 21 → ('11) 200 → ('16) 217
- 한편,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재련, 김혜영, 어수봉, 이레사 페라라, 차윤경, 최광숙, 한건수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신규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.

- ※ (붙임) 1. 안건 주요 내용
 2. 위촉 대상 위원명단

[1]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

I. 추진배경

-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10년, 성장에서 성숙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에 대비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 필요

II. 현황 및 진단

①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및 특성 분석

- 다문화가족 자녀(만18세 이하)는 '06년 2만5천여명에서 '15년 20만 8천명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, 학령기 자녀 증가 추세 (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, 행자부)
 - '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, 9-24세 다문화가족 자녀 6만6천여명(추정치) 중 중도입국자녀는 1만7천여명으로 추정
-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1.01%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률 0.83%에 비해 높은 수준(2015 교육기본통계, 교육부)
-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이상 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7.8%는 학생이나, 5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, 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는 니트(NEET) 상태로 지원 대책 필요
 - 특히, 니트(NEET) 상태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는 32.9%이며, 일자리·직업기술 훈련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큼(20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, 여가부)

② 정책 진단

-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,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배경(국내/외국성장)을 고려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책 재설계 추진
- 다문화수용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, 내용·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

Ⅲ. 세부 추진방안

①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

- (영유아기) 언어발달 시기에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* 및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부모·자녀 간 정서적 유대 강화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

* 다문화유치원 : ('15) 30개소 → ('16) 60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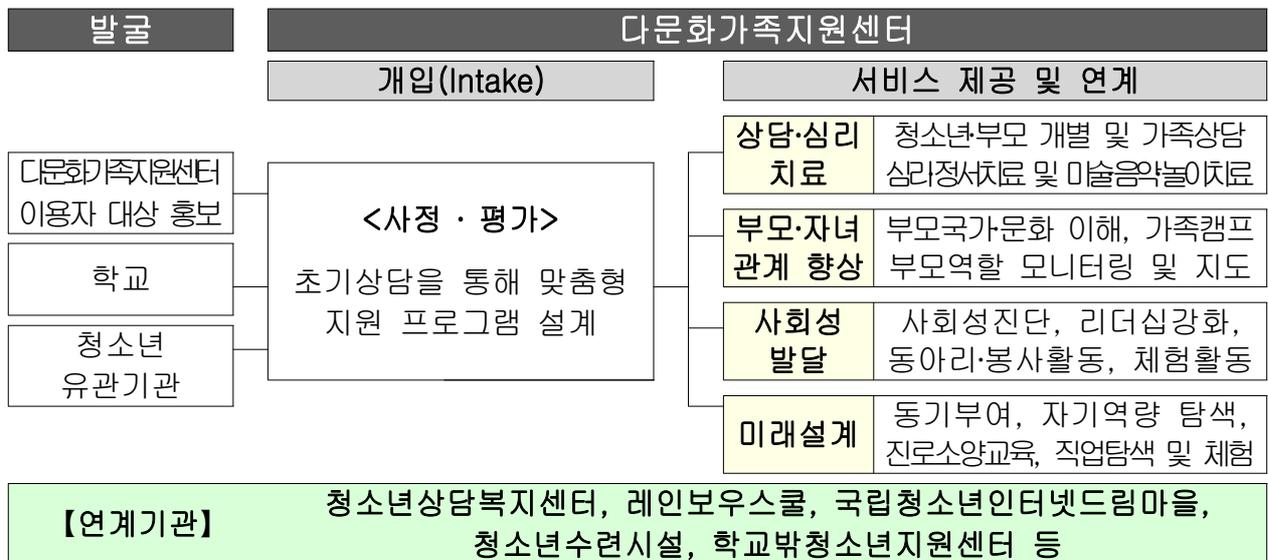
**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참여 가구 수 : ('15) 5,660가구 → ('16) 8,000가구 이상

- (학령기)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글로벌 인재로 양성

- **다재다능프로그램***을 추진하여 가족관계개선,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지원

* '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운영(신규)

<다재다능 프로그램 추진체계>



-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**대학생 멘토링 확대** 및 수학, 과학 등 **교과 보조 교재 개발·보급**

-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**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** 제공 및 **진로지도, 직업교육기관 연계** 등 지원 확대*

* 지원 대상 확대 : ('15) 고등학교 재학생 → ('16) 중·고등학교 재학생

- (청년기) 다문화가족 자녀가 **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**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·경제적 주변화 문제 해소

- **다문화 이중언어 인재DB**를 구축하여 인재 발굴·추천에 활용

- 어학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고, KOICA 해외사무소 등에 **다문화청년 인턴채용** 추진
- **다문화장병 증가에 대비, 복무부적응 및 차별이 없도록 복무여건 조성**
 - * 다문화 장병 복무 관련 개선방안 연구를 통한 각 군 병영생활규정 보완 및 군 부대개방 행사, 병영체험캠프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이해 제고

② **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**

- **(진입지원)** 학업중단, 니트(NEET) 문제 해결을 위해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·도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**공교육 진입지원**
 -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**학력심의위원회**를 통해 **편입학 절차 지원**
 - **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확대**하여 법, 제도, 문화 관련 정보 제공
 - * ('15) 24개 기관 → ('16) 33개 기관
- **(학업지원)** **한국어·한국문화 집중 교육***으로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, 학교 밖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**
 - * 다문화 예비학교 : ('15) 100개교 → ('16) 110개교
 - ** 레인보우스쿨(전일제/여름학교) : ('15) 17개소/1개소 → ('16) 22개소/22개소
- **(취업지원)** **'내-일을 잡아라'**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직업실무,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, **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**
 - * 내-일을 잡아라 프로그램 : '16년 6개소 추진(신규)
 - ** 취업성공패키지에 중도입국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

③ **외국인 밀집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**

- 시·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**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모델**을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
 - * 전문인력 지원, 교원연수, 다문화교육자료 개발·공유 등
- **방과후 아카데미 다문화 특화형 지정 확대**를 통해 돌봄 서비스 강화, 밀집지역 내 유치원·학교와 **다문화가족지원센터**를 연계하여 **각종 교육정보 다국어 제공**
 - *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282명 활동, 11개 언어 지원

4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장환경 조성

- (일반국민)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(www.danurischool.kr)을 개통('16.3월)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확산 추진
 - * 성인, 청소년, 교육자, 시설종사자, 근로현장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
- (교사대상) 보육교사 및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제고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각종 직무·자격 연수에 2시간(과목 : 다문화교육의 이해) 이상 편성 등
- (아동·청소년) 눈높이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건강한 또래 문화 조성
 - 다문화 중점학교* 운영 확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
 - * 다문화 중점학교 : ('15) 150개교 → ('16) 180개교
 - 문화다양성 교육 교구·교재 개발 및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, 역할체험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* 확대
 - * ('15) 23개교 운영→('16) 30개교 운영→('17) 다문화중점학교 연계 검토

- **(다문화가족 자녀 수)** 다문화가족 자녀(만 18세 이하)는 '06년 2만5천여 명에서 '15년 20만8천여 명으로 약 8배 증가하는 등 10년 사이 급격히 증가
 -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, 6세 이하 자녀의 비중이 가장 크나, 최근 들어 6세 이하 자녀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, 7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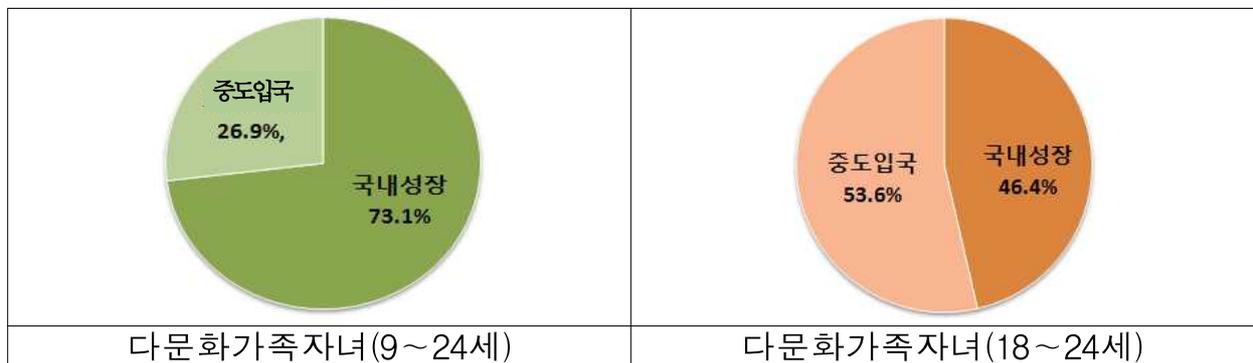
<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> (단위 : 명)

연도	연령별 현황				
	계	만6세이하	만7~12세	만13~15세	만16~18세
2015	207,693	117,877	56,108	18,827	14,881
	100%	56.8%	27.0%	9.1%	7.1%
2014	204,204	121,310	49,929	19,499	13,466
	100%	59.4%	24.5%	9.5%	6.6%
2013	191,328	116,696	45,156	18,395	11,081
	100%	61.0%	23.6%	9.6%	5.8%
2012	168,583	104,694	40,235	15,038	8,616
	100%	62.1%	23.9%	8.9%	5.1%
2011	151,154	93,537	37,590	12,392	7,635
	100%	61.9%	24.9%	8.2%	5.0%
2010	121,935	75,776	30,587	8,688	6,884
	100%	62.1%	25.1%	7.1%	5.7%

* 출처 : 외국인주민현황조사('15.7월), 행정자치부

- '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, 9~24세 다문화가족자녀 6만6천여명(추정치) 중 중도입국자녀는 26.9%인 1만7천여명으로 추정되며, 18-24세의 연령대에서는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높아 53.6%를 차지함

< 9-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대별 성장배경 분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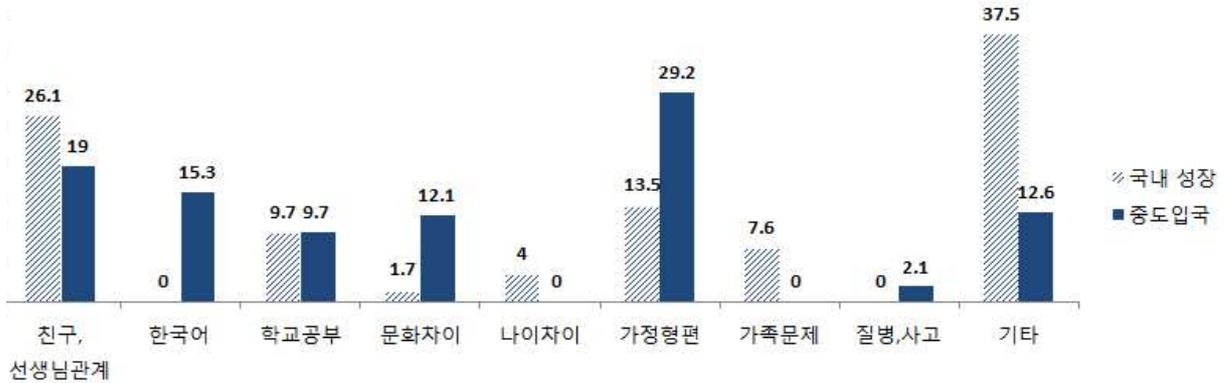


* 출처 :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

□ **(다문화가족 자녀 특성)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률은 '14학년도에 1.01%로 전체학생 학업중단률 0.83%에 비해 높은 수준**

- 학업중단의 사유로는 국내성장 자녀는 친구와 선생님 관계, 중도입국 자녀는 가정형편, 친구·선생님 관계, 한국어문제가 가장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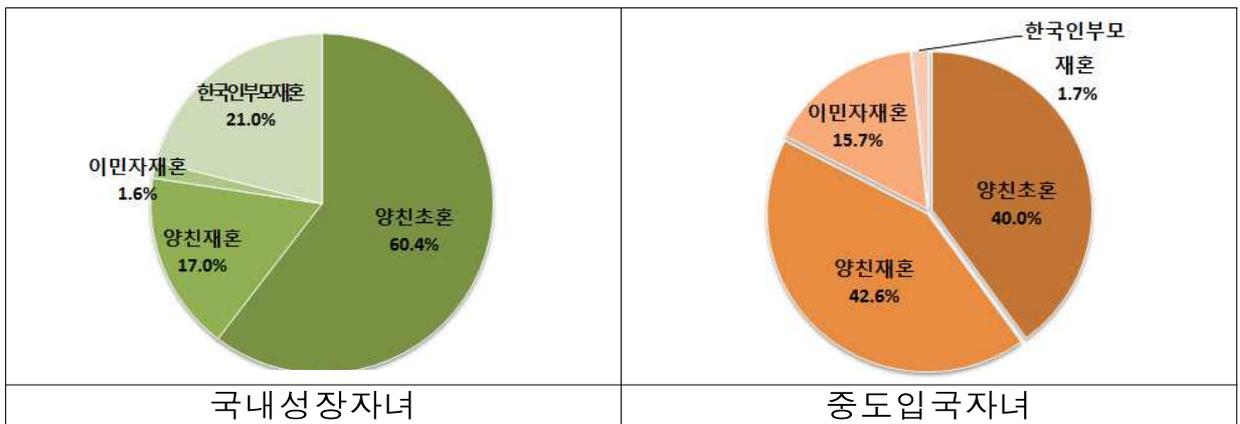
<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(단위: %) >



* 출처 :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

-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, 재혼가족 비율이 높아 가족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

<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 혼인경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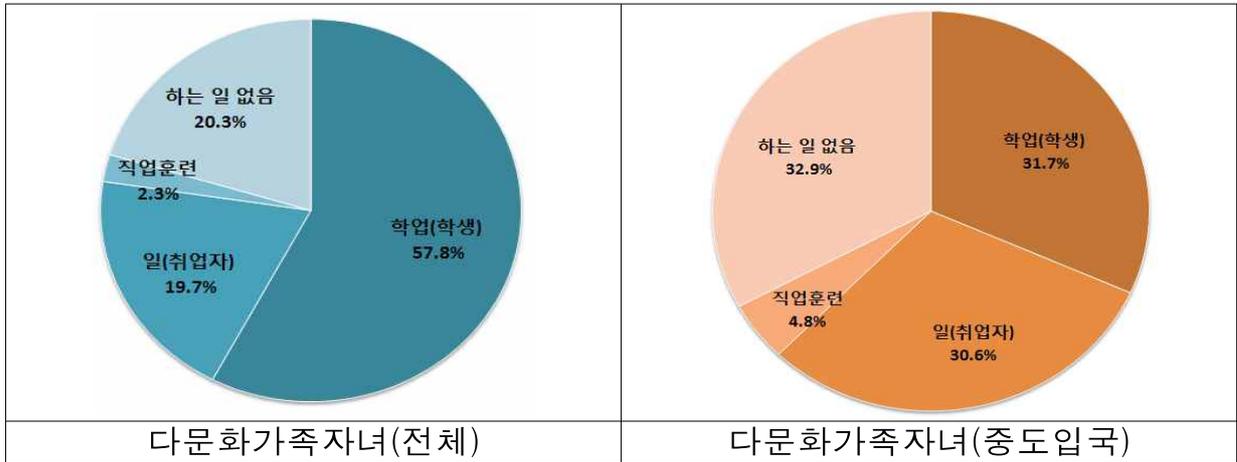


* 출처 :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

-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7.8%는 학생이나, 5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, 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는 니트(NEET) 상태로 지원 대책 필요

- 특히, 니트(NEET) 상태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는 32.9%로 국내 성장 자녀 10.9%에 비해 3배 이상 높음

< 15세 이상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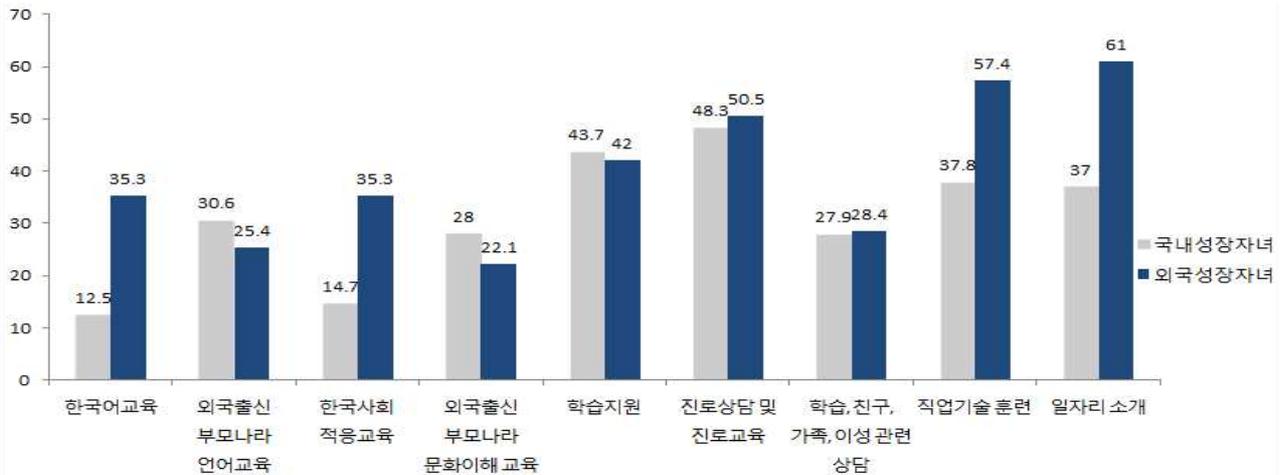


* 출처 :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

- 국내성장 자녀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,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, 중도입국 자녀는 일자리 소개, 직업기술 훈련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크므로 성장배경별 정책 설계 필요

< 다문화가족 자녀 서비스 지원 요구 >

(단위:%)



* 출처 :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

※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추이(행정자치부)

(단위 : 천명)



[2]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

I. 추진 경과

- 7개 관계부처 합동 「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」 마련 (‘14.1.15) 이후 소관 부처별 주요과제에 대해 이행 추진

II. 그 간 성과 및 평가

① 분야별 유사중복 조정 이행 및 추진 현황

◇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(‘14.1.15) 마련 이후, 5개 영역 유사·중복 조정 과제 대부분 이행 완료, 정상 추진 중

- **(한국어교육)** 사회통합프로그램(법무부) 및 한국어교육(여가부) 지자체로 일원화,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하여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
- **(이중언어교육)** 언어영재교실(여가부)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개편하고, 이중언어교육(교육부)은 전체 학생으로 확대
- **(방문교육)** 방문자녀생활서비스(여가부)는 가정방문, 지원기준 조정하여 본인부담금 도입, 대학생 멘토링(교육부)은 학교, 공공시설에서 학습 지원
- **(콜센터 통합 및 연계)**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전화를 통합 (1577-1366, 여가부)하고,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, 법무부) 연계 추진
- **(자조모임)** 자조모임(여가부), 읍면동 생활멘토단(행자부) 통합, 결혼 이민자네트워크(법무부)는 이민자 전체로 확대

◇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규 유사·중복 사업 발굴·조정 추진

- **(언어발달 서비스)** 다문화유치원(교육부)과 언어발달지원서비스(여가부)를 연계하여 유치원 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
- **(이중언어 말하기 대회)** 여가부, 교육부에서 중복 개최하던 ‘이중언어 말하기 대회’를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

2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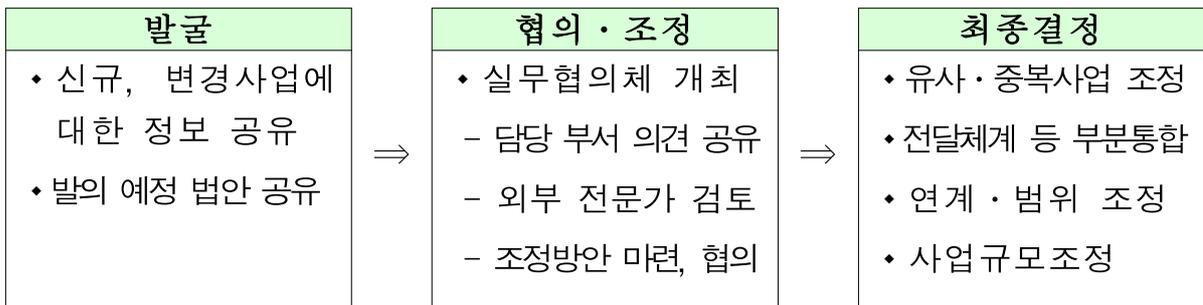
- **(사업 효율화)** 다문화가족 정책의 재정지출 절감 및 사업효율화 제고
- **(시너지 효과 창출)** 부처 간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사업 실적 및 만족도 증가
 - *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 6.7% 증가, 언어발달지원 교육대상 6% 증가

III. 유사·중복 조정 관리 방안

1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

- **(중앙부처)** 다문화가족정책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(10개 부처) 상시 운영 및 신규사업, 계속사업 변경 시 사전 협의·조정 의무화
 - *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반영('16)

<부처 간 유사·중복 조정 체계>



- **(지역)**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지역 내 또는 중앙부처와 유사·중복사업 조정 기제로 활용

2 유사·중복사업 조정실적 평가체계 마련

- **(중앙부처)**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, 유사·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자발적 조정 유도
- **(지역)** '16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사업 조정 우수사례 평가

[3]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

I. 목 적

-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2013~2017)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
- 관련기관 및 사업간 유사·중복 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

II. 근 거 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-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
-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보고

III. 평가 방향

- 세부사업별 계획, 관리, 성과 및 환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
- 특히, 유사·중복 사전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, 기존사업 확대 시 관련기관 간 협의·조정 여부 및 사업계획에의 반영 등 환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
- * 지자체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 간 협의·조정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반영하여 유사·중복 조정 유도('16~)

(위원은 가나다 순)

사 진	성 명	현 직	주 요 경 력	비 고
	김재련 (여, 45세)	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	◦ (前)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 위원회 위원장 ◦ (現)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비상임이사	
	김혜영 (여, 52세)	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	◦ (現) 한국가족학회 부회장 ◦ (前)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	
	어수봉 (남, 61세)	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부 교수	◦ (現)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원장 ◦ (前)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	
	이레샤 페라라 (여, 42세)	톡투미(이주여성 자조단체) 대표	◦ (現)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◦ (前) 물방울나눔회 부회장	
	차윤경 (남, 62세)	한양대 교육학과 교수	◦ (前)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장 ◦ (現)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◦ (現) 한양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장	연임
	최광숙 (여, 52세)	서울신문 논설위원	◦ (現)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위원 ◦ (前) 여기자협회 총무이사	
	한건수 (남, 53세)	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	◦ (現) 강원대 다문화연구소 소장 ◦ (現)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	